

‘점주 10%·1000명’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상 가능해져

공정위, 가맹사업법 기준 마련
점주 가입단체 정식등록 가능

등록단체 비율 30% 미만일 시
미가입 점주 의견 수렴 의무화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들과의 협의에 의무적으로 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구체적인 실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한

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정식 등록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최소 가입자 수는 30명 이상으로 하한선이 설정됐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며 점주단체와의 대화를 기피하던 관행을 깨기 위해 등록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이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됐다.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 비율이 전체 가맹점의 30% 미만일 경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했다.

아울러 소모적인 협회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를 마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향후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새로운 주제라 하더라도 기존 협의 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이 지나야 재요청이 가능해,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의 자율

성을 해치는 명의 도용이나 서류 위변조, 가맹본부가 가입을 강제한 경우 등은 등록이 취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협, 농촌활력 플랫폼 ‘농심N천심’ 신설

범국민 농심천심운동 확산
국민참여단 활동 참여 지원
신규가입 시 커피쿠폰 제공

농협중앙회가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확산을 위해 농촌활력화 포털 ‘농심N천심’을 신설했다. 농심천심운동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농협이 실시 중인 범국민 농촌활력화 운동이다.

농심N천심은 농부의 마음(농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하늘의 뜻(천심)이자 국가의 근간이라는 농심천심운동의 철학을 바탕으로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간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농심천심운동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농심천심국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참여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털 명칭의 ‘N’은 농심과 천심을 잇는 ‘연결(AND)’,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새로움(New)’, ‘NH농협’을 의미한다. 농협이 추진하는 농촌활력화와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다.

농심N천심 ▲농심천심운동 소개 ▲농촌재능니눔 중개 ▲농촌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심천심국민참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촌활력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포털 오픈을 기념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회원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 30일부터 신규가입 회원 선착순 3만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추천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농심N천심이 국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이자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EIT “AI로 다양한 일상문제 해결”

100일간 ‘AI 라이프 챌린지’ 열어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연구자, 국민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2026 AI 라이프 챌린지’를 8월 1일부터 총 100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KEIT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제상을 바꾸는 AI, 모두를 위한 도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챌린지는 국민 체감도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기술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약자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의 선정 비중을 40%까지 늘린다.

대회 규모도 예년에 비해 커졌다. 총 상금 규모를 1800만원 상당으로 늘렸으며,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부 장관상(상금 300만)을 신설해 대회의 위상을 높였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이 후원에 참여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대회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제안하는 ‘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와,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AI 개발자가 협력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8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아이디어 챌린지는 AI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용원 KEIT 원장직무대행은 “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편을 연구자와 개발자가 함께 해결하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나게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의 혜택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의 상세한 참여 방법과 안내사항은 KEIT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홍줄나비’ 지정

환경변화 따른 서식지 파괴 영향

날개에 선명한 붉은 줄무늬가 특징인 곤충 ‘홍줄나비’ (사진)가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최근 지속되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홍줄나비를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홍줄나비는 날개를 편 길이가 57~60mm인 중형 나비로, 흑갈색 바탕의 날개 뒷면에 뚜렷하게 새겨진 붉은 줄무늬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1년에 딱 한 번 어른벌레(성충)가 되며 주로 7~8월에 관찰된다. 국내 나비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잣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특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동북부 산지의 천연림 중심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산지의 낮은 기온에 적응해 살아온 산지성 나비인 탓에, 기후변화에 따른 연평균 기온 상승이 최근 가장 큰 생존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홍줄나비는 활동 범위가 매우 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가 사실상 불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환경변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를 홍줄나비 개체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한편 홍줄나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을 무단으로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줄나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사기죄 숨기고 가맹계약 기만적 정보제공 적발

와인·커피 소매 가맹브랜드 ‘비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맺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이 정보공개서에 임원의 형 신고 사실을 누락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적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의 고 모 대표는 사기죄를 범해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으나, 본사는 이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 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임원의 사기죄 신고 사실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를 숨긴 것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빛강물은 가맹 희망자 42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필수 자필 기재 사항이 누락된 확인서를 교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익위, 30만명에 공공기관 청렴도 묻는다

이달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공직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5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8월부터 11월 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과 내부 공직자(내부청렴도)를 대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 인식과 실제 경험 등을 측정한다. 결과는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60%)을 차지하는 ‘청렴체감도’ 성적에 반영된다. 설문조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답변 내용은 철저히 암호화되어 보호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로 측정된 청렴체감도에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청렴도 감점(최대 15%)’을 종합해 올해 12월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은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정일원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공공부문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공공부문의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종=한용수 기자